

한중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본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동기'와 '접근'

이영길 / 한국국방연구원 중국군사연구실장

중국은 21세기 도약을 위한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함으로써 미래 지향의 보다 광범한 對한반도 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로 관련있는 동기들이 작용할 것이다.

첫째, 현대화에 전념하고 있는 중국에게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전을 가장 중시함으로써 북한의 대중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을 묵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쌍무적 안보조약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것이 방어적 성격에 불과하며, 북한이 침략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결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둘째, 중국의 對한반도 동기는 수사적 희망들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참여' 확대일 것이다. 참여 확대는 '지렛대'가 요구되며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다 철저한 '등거리' 접근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계속 '이념'보다는 '이익' 및 '현실'에 기초할 것이다. 중국의 광범위한 '실용주의적' 태도는 "북한이 중국은 맹방도 적도 아닌 오직 이웃일 뿐"이라는 최근의 언급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셋째, 한반도 정세는 역사적 전기를 맞고 있다. 통일 한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역내 열강들의 안전 혹은 균형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가운데 호전적 정권의 제거, 파괴적 충돌의 종식, 역동적 갈등의 해소 등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 한국은 중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과정 및 그것이 동북아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 관계 유지 및 남한과의 실리 관계 발전 등을 초월한 여타의 '장기적' 목표 및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오직 여타 열강들의 對한반도 영향력에 대한 견제 및 '중화'에 가장 관심이 있을 것이다.

머리말

주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대외 정책에서 지정학적 중요성때문에 줄곧 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정세 인식, 국가 이익, 장기 목표, 대내 관심, 남북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됨으로써 대북 '일변도'에서 현저한 남북 '등거리' 경향으로 흐르기 시작하였다. 1992년 8월 중국은 마침내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결정하였다.

수교 이후 중국은 경제·정치·외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양국은 이미 주요 교역 및 투자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국가간 경제적 상호 보완성 및 의존성의 확대를 포함한 밀접한 경제 관계는 불가분의 정치적·전략적 관계 발전을 수반한다.

한국은 이미 경제 발전 및 북방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 및 통일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한국은 국제적 위상 및 역할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안정 및 발전 과정에서 상응한 역할이 기대됨으로써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지난해 이미 한국과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하였으며, 금년 8월 조성태 국방장관을 공식 초청하여 최초로 '한중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그동안 가

장 민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오던 군사 부문까지 획기적인 관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은 21세기 도약을 위한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함으로써 미래 지향의 보다 광범위한 對한반도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중국의 對한반도 관심 및 동기는 주로 '한국 요소'가 반영됨으로써 ① 한반도의 '안정' 유지 전략, ② 한반도에 대한 '참여' 확대 전략 그리고 ③ 한반도 '미래'에 대한 포석 전략 등 보다 실용적인 성향을 더해갈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 유지 전략

현대화 목표와 평화적 환경의 조성

중국은 현재 '현대화'에 여념이 없으며 따라서 '평화적' 환경이 긴요하다. 중국은 경제 개혁의 성공이 이른바 '종합 국력'을 증강하고 나아가 국제적·지역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요체로 인식하고, 개혁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평화적 국제 환경'의 조성을 최우선 안보 목표로 설정하였다.

현대화 건설이 핵심 과제로 선정된 이래 중국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평화적 환경'을 역설해 왔다. 일찍이 1992년 楊尙昆 前 국가주석은 "소련 해체 이후 아태 지역에서는 군사적 충돌 및 대치가 출현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중국은 정력을 집중하여 현대화 건설

추진에 진력하고 있어 장기간 평화적 외부 환경 특히 주변의 평화가 요구된다"고 천명한 데 이어, 李鵬 前 총리도 유엔안보리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은 鄧小平이 주창한 개혁·개방의 방침을 꾸준히 실행한 결과 국가의 면모를 크게 변화시켰다.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도상에서 자신에 충만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인구가 중대한 일개 개발도상국가로서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장기간의 역사적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대외적으로는 장기간의 안정적이며 평화적인 국제 환경이 요구되며, 대내적으로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정치 상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李鵬의 언급에서 이미 함축적으로 묘사되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과 관련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전체 상황 즉, 한반도의 안정 유지 및 긴장 완화 가능성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에 대한 고려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지배해왔다. 1992년 중국의 한중수교 솔선은 그의 한반도 안전 유지 의도에 대한 전향적인 척도로 인식되었다. 안전에 대한 고려는 최근 江澤民의 언급에서 재확인되었다. 특히, 그는 방한 기간중 국회 연설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의 수호가 한반도 정책의 '기본 준칙'이라고

천명하였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와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경은 중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중국을 침략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북진하자 중국은 자신의 군사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즉각 개입하였다. 한반도는 현재 지구 상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의 하나이다. 22만 km²의 한반도에는 200 km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의 상비군 병력은 약 170만 명에 이른다. 이는 한반도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그리고 쌍방은 잘 훈련된 육·해·공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전 수행이 가능한 현대화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재발은 중국에게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다. 그것은 중국에게 준비없는 전쟁에의 개입을 강요할 위험이 있다. 중국의 개입은 엄청난 정치·경제·군사적 및 외교적 대가와 희생이 수반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한국전쟁은 역내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

주한 미군의 현실적 묵인

중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가장 중시함으로써 북한의 대중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

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을 묵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¹⁾ 또한 중국은 북한과 쌍무적 안보조약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것이 방어적 성격에 불과하며 북한이 침략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결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1995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조우호조약이 파병 조약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1997년 봄 唐家璇 당시 외교부 부부장은 방한 기간중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5월 李鵬 前 총리는 “북한은 동맹이 아니며 하나의 이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가능한 상황 하에서 중국은 북한이 도발한 분쟁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북한에서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중국은 북한에서의 경쟁이 불필요한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사’ 혹은 ‘직접적 통제’를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 핵문제가 줄곧 동북아 안전의 한 중대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접국으로서 중국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표명해왔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설사 그것이 북한이라 하더라도, 한 국가의 핵무기 보유는 중국의 지역 전략

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연쇄적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즉 북한의 핵문제는 중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4강 관계를 포함한 대외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화를 초래 ‘경제 불안’의 가중, ‘개혁·개방’의 지연 및 ‘체제 붕괴’의 우려를 자아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중국의 ‘국가 이익’에 배치될 것이다. 총체적 핵불안이 중국의 이익에 배치됨으로써 중국은 일찍이 북한의 핵계획으로 야기될 위협을 충분히 감지해왔다. 중국은 북한의 핵계획에 기여할 기술적 및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기록이 없다.

정전체제의 한시적 지지

지난 1994년 11월 李鵬 前 총리의 방한을 수행 중이었던 沈國放 외교부 대변인은 정전협정 대체 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한국도 적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5년 5월 李鵬은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이홍구 前 국무총리와 회담하고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1) 石井明(1995), “中國がらみだ日韓關係”, 『現代日本研究會學術會議論文』, p. 12~73; 「연합통신」(1993. 6.1),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p. 28; Fei-Ling Wang(1996), “Chinese Perception of the U.S.-ROK Alliance,” Tae-Hwan Kwak(ed.), *The U.S.-ROK Alliance in Transition*, Kyungnam University Press, pp. 73~91.

원칙과 한반도 질서의 기초는 정전체제이므로 현재의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정전위 철수’ 발표 직후, 錢其琛 외교부장은 “중국은 진심으로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 유지를 희망하며,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협정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현재의 정전협정은 유효하며 관계 당사국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대북 정책의 국제적 공조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실험 강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던 지난 6월, 스탠로스 美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한 연설에서 “현재 중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을 방문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측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 중국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뉴질랜드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江澤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해준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경제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기대하였다. 이에 대해 강 주석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할 것이며 불리한 일이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북한측에게도 이러한 “솔직한 견해를 피력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은 새로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행동을 계속 억지할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은 그의 전략적 자원, 개입 및 권위에 의존한 다양한 수단을 구사할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유도, 핵·미사일 야심 포기 압력, 경제적 지원 유지, 미국의 제재 가능성 경고, 남북회담 주선 및 촉구, 그리고 對남북한 관계의 ‘교묘한’ 조정 등이 포함될 것이다.²⁾

2) Thomas W. Robinson(1994, 6.28), “China’s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Question,” AARE Report.

한반도에 대한 참여 확대 정책

영향력 강화와 등거리 접근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역설하고 있으나 중국의 동기는 그의 수사적 희망들을 훨씬 초월한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참여 및 실리 확대 노력이다. 한반도에 대한 실리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중국은 '지렛대'의 확보가 요구되며,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다 철저한 '등거리' 접근이다.³⁾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줄곧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왔으나 80년대 이후 남한과의 비공식 관계를 시작으로 서울 아시안 게임 및 올림픽 참가, 남한의 유엔 가입 지지, 남한과의 관계 정상화,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처 그리고 '4者회담' 참가 등에 이르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보다 중립적인 정책을 추구해왔다.

중국의 '중립적' 및 '등거리' 정책은 한반도에서의 심각한 균형 붕괴 및 충돌 재발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⁴⁾ 즉, 러시아와 중국은 평양의 도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전반적인 열세 하에서 북한은 도

발에 의한 자멸을 택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 미국 역시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며, 북한의 연착륙 및 남북한의 화해를 통한 점진적 및 평화적 통일이 진행될 것이다.

북한과의 우호 관계 유지

따라서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계속 '이념' 보다는 '이익' 및 '현실'에 기초할 것이다. 여기에는 對남북한 관계의 균형 유지 및 그것을 통한 對한반도 영향력 유지 노력은 물론, 심지어 미국의 북한 정책에 대한 묵종 및 협력 그리고 주한 미군 유지에 대한 묵인을 포함한 통일 이후의 문제들까지 망라된다.⁵⁾ 중국은 현재 자신의 이익과 관련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을 불투명한 대미 관계, 그리고 대만 문제 및 미일동맹 등에 대한 우려들과 분리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여하한 근본적인 이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 그리고 비핵화 유지 등에 관하여 미국과 공감하고 있다고 믿는다.

중국의 광범위한 '실용주의적' 태도는

3) Eric A. McVodon(1997. 9.14~16), "Chinese Military Strategy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paper for the Conference on the PLA*, sponsored by AEI.

4) Banning Garrett and Bonnie Glaser(Winter 1997), "China's Pragmatic Posture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Defense Analysis*, vol.IX, no.2, pp. 63~91.

5) *Ibid.*

“북한이 중국은 맹방도 적도 아닌 오직 이웃일 뿐”이라는 최근의 언급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즉, 북한과의 우호 관계 유지 노력에서 중국의 주요 관심은 이념적 우방의 보호를 초월한 한반도의 안정 유지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의 對남한 정책 역시 국가 이익에 기초함으로써 당분간은 보다 긴밀한 對남한 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 및 ‘방자한’ 평양 정권에 대한 유용한 지렛대로 간주될 것이다.

최근 중국은 신중한 외교를 통한 대북한 및 對남한 관계에서의 ‘균형’ 유지에 성공하였다. 중국과 남한과의 경제적·외교적 관계 확대 그리고 북한과의 정치·경제·군사적 관계 유지 등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무역, 원조 및 안보 공약을 축소하고 평양을 ‘오만하게’ 지원함으로써 기교를 더하였다.⁶⁾

남한과의 실리 관계 발전

한국의 한반도내 위상 강화 그리고 한국과의 급속한 무역 및 투자 관계 확대에 따른 이해가 고려됨으로써, 중국의 균형 정책은 최근 ‘안정’ 및 ‘발전’의 축진이란 자신의 이익이 반영된 보다 ‘실용주의적’ 접근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북한과의 공식 관계가 주

로 의례적 교류로 제한되고 과거에 누렸던 ‘혈맹’ 관계가 퇴색되는 가운데, 1995년 江澤民의 방한을 비롯한 수차례의 한중정상회담은 원대한 경제·정치적 관계를 포함한 미래 지향적 포석으로 해석되었다. 중국의 對남한 군사적 관계 역시 한반도 관계에서의 ‘균형’ 유지 노력과 병행되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북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이완되면서 북한은 중국에게 경제·전략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한중 관계가 변화되면서 한국은 경제·전략적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중국 관리들 사이에는 한중 관계의 발전에 대한 만족과 기대가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이미 지역의 상황을 더욱 유동적으로 만들었으며 북한을 고립화 및 잠재적 위협 속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분간 미래가 불투명한 한반도는 긴장 완화 및 현상 유지가 중국의 최소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제 질서 및 한중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접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중국에게 긴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안정 유지 및 영향력 확대와 관련하여 북한의 경제적 및 정치적 급변 혹은 붕괴는 매우 위험하다. 현재 한반도는 구 동서독 통일 당시와 같은 여건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내 급변 사태는

6) Eric A. McVodon, *op. cit.*

외부의 '개입' 유혹을 촉발할 수 있으며, 동북아 지역을 심각한 충돌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연착륙 유도가 주변 모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이 채택한 것과 유사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한국, 일본 및 미국 등과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길이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 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냉전의 종식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경제적·정치적 상호 작용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하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약화된 중국의 對 북한 관계 및 '지렛대'는 김정일이 권력을 공식 승계함으로써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한반도 미래에 대한 포석 전략

통일 한국의 수용과 대비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변 4강의 이해가 교차하는 민감한 지역이다. 4강의 전략적 이익이 상충됨으로써 한반도는 또 다시

그들간의 상호작용 무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 4강간의 상호 작용은 국제 정치의 속성 및 한반도의 위상 변화로 말미암아 보다 광범위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⁷⁾

현재 한반도 정세는 역사적 전기를 맞고 있으며 상당히 미묘하다. 중국은 미래 관계를 위한 '복선' 매설 및 미래 전략을 위한 '입장' 정리에 관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인식에서 한반도 '통일의 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은 통일 한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해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상 중국의 '실용주의적' 對한반도 접근은 현상 유지 불가 가능성의 수용으로 시작된다. 對남북한 균형 정책을 표방하는 중국의 일관된 수사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사실상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남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통일은 궁극적으로 경제적·정치적 능력을 포함한 '종합 국력'에서 우위를 점할 남한의 주도로 달성될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되고 있다.⁸⁾ 중국은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를 주저할 뿐, '남한 방식'에 의한 궁극적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대체로 '체념' 혹은 '묵인' 하는 입장일 것이

7) Donald S. Macdonald(Summer 1992), "The Role of the Major Power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pp. 137~140.

8) USIP(1997. 10), *Special Report: North Korea's Decline and China's Strategic Dilemmas*: Banning Garrett and Bonnie Glaser, op. cit.

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임박하였으며, 따라서 중국은 이미 '각색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⁹⁾

중국의 인식에서 한반도 균형의 변화는 모든 당사국들 사이의 정책적 조율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미국, 중국 및 남북한 사이의 훨씬 진지한 대화가 포함된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및 한반도에서의 변화가 동북아의 세력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될 것이다.

중국의 관심은 한반도내 한국의 중요성 증대가 동북아 세력 균형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그것이 미국에게는 유리하게 그리고 중국에게는 불리하게 전개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정책에 대하여 복합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을 향한 하나의 조치로서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해야 할 상황에서 중국의 對북한 지렛대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기회는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남북 화해의 과정을 촉진해야 할 입장이거나 그것을 재촉하는 미국의 동기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이 희생될 수도 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4者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참여해야 한다.

통일 한국은 중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 및 한중 양국의 밀접한 관계 발전은 미국을 포함한 여타 열강들의 안전 혹은 역내 세력 균형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동아시아에서의 호전적인 정권의 제거, 한반도에서의 파괴적 충돌의 종식 그리고 세력간 역동적 갈등의 해소 등을 통한 긴장 완화에 보다 기여할 것이다.¹⁰⁾

평화적 과정의 중시

동시에 중국의 인식에서 통일 한국이 지역의 안전 및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과 국경을 공유하게 될 통일된 그리고 보다 부강한 한국은 동북아 전략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 및 한중간의 상호 보완적인 전략적 이해 관계를 감안한다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해 관계는 불투명하다. 중국과 국경을 공유하게 될 보다 강력한 그리고 독립된 통일 한국은 동북아에서 더욱 독자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중국의 정책 조정을

9) 「亞洲週刊」(1994. 11.13), "北京與漢城的鬱陽天", pp. 41~48.

10) Robert S. Ross, "The Geography of the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23 : 4, pp. 81~118.

강요할 수 있다.¹¹⁾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 그 자체가 긴장 완화를 보다 증진시키거나 정착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통일의 달성보다는 통일에 이르는 긴장 완화의 과정에 주로 관심이 있을 것이다. 중국은 비우호적인 한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이익에 부합되는 한국을 기대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체제를 정의하는 것은 이미 무의미해졌다. 중국은 경제 개혁과 그에 수반되는 사회 변혁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조급하게 서둘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남북한 쌍방은 모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장기간 누적된 정치적 적대 및 불신 그리고 군사적 대치 등으로 말미암아, 남북한간의 모순 및 대립은 쉽게 해소될 수 없다. '화해'와 '통일'은 동의어로 간주되고 있으며, '화해'는 사실상 '통일'로 가는 첫 단계이다. 중국은 화해의 과정이 중요하며 따라서 그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지지한다.¹²⁾ 더구나 당면 여건에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간여할 수 있는 수단 혹은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남과 북 가운데 한 쪽의 붕괴를 가정하는 '월남 방식' 혹은 '독일 방식'은 여타 외세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다.

모험적 행동의 자제

결국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 관계 유지 및 경제적 분야를 포함한 남한과의 실리 관계 발전 등을 초월한 여타의 전략적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관심은 오직 여타 열강들의 對한반도 영향력 축소 혹은 최소한 그들에 대한 통제 및 그들간의 '중화'를 보장하는 데 있을 것이다. 중국은 열강간의 '균형' 유지가 그들의 영향력 제거보다 더욱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은 보다 '단기적·전술적' 문제들에 집중됨으로써 '수세적' 성향을 견지할 것이다. 즉, 중국은 통일 한국에 대한 지배력 획득보다 한반도의 급변 가능성에 대비한 국가 이익 수호 및 對한반도 영향력 유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것이며, 특히 미국을 대체함으로써 통일 한국에 대하여 배타적 혹은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할 외세로의 부상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¹³⁾

11) Robert S. Ross ed.(1995), *East Asia in Transition: Toward a New Regional Order*,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 111.

12) Alfred D. Wilhelm, Jr.(Summer 1992), "Sino-Korean Relation:The Year After,"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IV, no.1, p. 99.

13) Banning Garret and Bonnie Glaser, *op. cit.*

중국의 수세적 성향은 역시 '반응적'인 한반도 정책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중국은 최소한 현재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미국의 주도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돌발적 사건이나 환경 변화가 강요하지 않는 한, 중국은 한반도의 상황에 대하여 '선행적' 접근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회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나, 정치적 '붕괴'의 과정에서는 그 정권을 구출하기 위한 '모험적인' 노력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¹⁴⁾

맺음말

최근 중국은 경제 개혁의 성공을 위한 '평화적 국제 환경' 조성을 대외 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독립 자주 평화 외교', '선린 관계 증진' 및 '전방위 외교'를 적극 추진해왔다. 현재 북경은 상당한 평온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중국정치체제의 성숙을 예고한다. 특히, 중국은 야심적인 개혁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중대한 내부 개혁은 또한 그의 대외 태도 변화에 계속 반영될 것이다.

중국은 서방 국가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

지를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지역의 긴장 완화 노력에 동참해왔다. 특히, 중국은 자신의 위협과 희생을 무릅쓰고 아시아의 금융 위기 완화에 적극 기여해왔다. 중국은 현재 고도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과 일련의 정상회담을 진행해왔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과 '21세기를 지향한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 관계' 구축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적 및 세계적 사안들에 대한 중국의 참여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중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신뢰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실상 중국은 이미 다극 세계의 한 극으로서 역내 안정 및 발전 그리고 신질서 구축 과정에서의 결정적 요소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당면 이해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건설적' 역할을 계속 담당할 것이다. 脫냉전시대를 맞아 지역 상황이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로 말미암아 한중 양국의 미래 관계 역시 광범위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한중 관계는 역내 상황의 변화 및 동향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동시에 한중 관계는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행히 한국과 중국은 양국과 관련된 광범위한 현안들과 복잡한 역내 문제들에 대처함에 있어서 상호 이

14) *Ibid.*

해를 공유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경이적인 발전 및 성과를 이룩하였다. 양국은 이미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었다. 이제 양국은 모두 도약을 위한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함으로써 보다 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관계는 천혜의 유리한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다. 세계의 다극화 추세 하에서 한중 관계는 '지정학적 인연', '공동의 이익' 및 '상호 의존성' 등 장족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21세기 지향의 보다 광범위한 그리고 성숙한 한중 관계로 도약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공동 인식 및 노력들이 요구될 것이다.

첫째, 한중 양국은 전략적 이익의 상호 공통성 및 의존성 심화에 따른 전략적 협력 강화 및 전략적 관계 구축의 단계에 이르렀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각국은 모두 다극화 추세에 부응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 즉 '전략적 동반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른바 '전략적 동반자'란 배타적 혹은 제3국을 겨냥한 동맹 관계가 아닌, 순수한 쌍무 관계 및 중대한 국제 문제에서의 장기적 협조 및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둘째, '동반 관계'의 구축은 다극화 세계에서의 위상 확보 및 제고를 의미한다. 한중

양국은 '정치적 대화'의 강화 그리고 상호 '정치적 이해' 및 '정치적 신뢰'의 증진을 촉진함으로써 21세기 '전략적 동반 관계'를 더욱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은 '경제적' 상호 보완성 및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 가능성이 지대하다. 한중 경제 관계는 이미 전략적 이해와의 불가분성을 갖게 되었다. 양국의 근본 이익 및 장기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경제 관계가 구축된다면, 이는 또한 피차간의 '정치적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脫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은 광범위한 그리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안보 요소의 다양화', '안보 이익의 다방화' 그리고 그에 따른 '안보 관계의 다변화' 추세가 금후 안보 정세의 특징이 될 것이다. 현재 한중 양국은 군사적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더욱 충실화할 시기를 맞고 있다.

한중 양국은 상호 관계에서의 이익을 보다 증대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적 및 군사적 방면에서의 광범위한 '협력 일정'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9**